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해야

김 용 응
(충남발전연구원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모든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권적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아니다. 현재의 합헌 테두리 속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를 통하여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고 주민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판결내용 정확한 이해 필요

향후 방향 모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위헌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법리적인 측면만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을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현재의 판결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역사적인 당위성과 시대적인 필요성이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현재 결정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민적인 신뢰를 훼손시키며, 현재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만약, 위헌 판결내용이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 자체를 반대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권능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범한 것이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한다.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가 여전히 중요한 국정 과제이자 목표이며, 합헌적인 테두리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다짐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만약 위헌판결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순응해온 많은 국민들에게 받아드리기 어렵다.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적 검증과정을 거쳤고 국회의 적법한 입법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 합법적으로 추진된 국가의 핵심정책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은 수도권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국진입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국가정책의

폐지 여부는 몇 명 안 되는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듯이 대통령이나 정부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나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빌미로 신행정수도건설을 포기하고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회피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일방적으로 폐기 말아야

역사적 당위성을 지닌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의 폐지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과연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과밀과 난개발을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끝없는 침체와 쇠퇴화로 자생력마저 잃어가는 지방을 그대로 두고 국가의 발전은 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40년 가까이 정부기관, 기업, 공장의 분산정책을 추진했고, 분권시책과 다양한 수도권 규제시책 등을 수 없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수단일 수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이외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선호를 떠나서 미래의 국가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냉엄한 국제사회는 우리를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먼 훗날 지금의 성급한 판단이 선진국 실현을 좌절시켰다는 후회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